

좋은 공공건축, 풍요로운 생활공간을 만들다

임유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에 주목하다

지난 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날 오후에 서울 은평구의 구산동도서관마을에 들렀다. 도서관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동네 주민들로 북적였다.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책을 보고 신문을 보거나 야외 마당에서 여름 햇살을 즐기는 등 도서관 구석구석에서는 주민과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은 기존 골목과 주택을 도서관으로 개조한 프로젝트인데 골목과 주택의 앞마당, 다세대 주택 안의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그대로 남아 숨 쉬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도서관 하나가 주민의 일상과 동네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 어른들이 행정 업무를 보고 때로는 취미 활동을 하는 주민 센터와 복지관, 책을 읽고 빌리는 도서관,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의 집, 이 모든 건축물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공건축물은 이렇듯 도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자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학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공공시설의 적정 공급을 위한 방법론 연구가 이루어졌고 건축 분야에서는 공공청사와 학교·박물관 등 시설별 건축계획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공공건축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환



구산동도서관마을 전경



구산동도서관마을 내부

경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바라보고 직접적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부족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07년 개소 초기부터 공공건축이 국민의 행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공공건축 통합화, 디자인품질지표, 공공건축 조성 절차 합리화, 건축디자인 기준, 시설별 공급기준과 계획기준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다섯 차례의 공공건축 설계포럼을 열어 설계자와 발주자,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는 공공건축의 중요성과 품질 향상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의 탄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다수의 연구와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현황을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공공건축 기획이 부실하고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한 문제, 가격 입찰 방식으로 설계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디자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공건축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 요구와 장소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제도과 절차가 미비하고 전문가 또한 부족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축 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세계 주요 국가는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조직을 운영한다. 미국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의 공공건축서비스(Public Buildings Service: PBS), 영국의 ‘건축·건조환경위원회(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CABE, 이후 Design Council에 통합)’, 프랑스의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다부처위원회(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Qualité des Constructions Publiques: MIQCP)’가 대표적 사례이다.

2010년 11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총괄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요 골자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동으로 2011부터 2년에 걸쳐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원기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1차연도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2013년 1월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일반사업으로 편성하여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지원, 설계공모 대행,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 등 다수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식(2013)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성과**

터 설립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졌고, 2014년 초에는 연구소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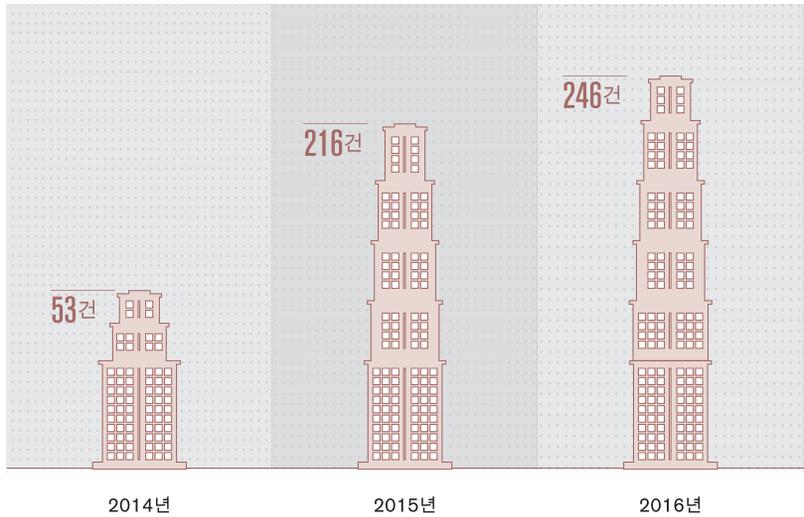
2013년 6월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이 포함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6월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 23일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법정 센터로 지정받게 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공건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관리 체계 개선, 매뉴얼 개발, 제도 개선 연구 등 공공건축의 조성에 필요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법정 업무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로 구성된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일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주안점을 확인한다. 2014년 6월 법정업무를 시작하여 2014년 53건, 2015년 216건, 2016년 246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는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의 발주와 기획, 디자인 관리,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공건축 조성 전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이러한 자문 업무는 매월 약 30건정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은 연 1~2차례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월 평균 업무 건수는 2014년 7.4건, 2015년 18.0건, 2016년 20.4건, 2017년 상반기 25.0건이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전검토 업무 건수



시한다.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공공건축의 합리적인 조성과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건축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며, 현재 지적기반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전검토와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정업무 외에도 지원업무와 연구를 수행한다. 지원업무에는 개별 부처의 공공건축 기획 지원, 지자체의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제안공모 또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의 공모 대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업무가 포함되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외교부·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강릉시·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지원하였다. 모두가 공감하는 공공건축의 지향점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 역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중요한 업무이다.

2016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6%가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사업 추진의 예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각종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

**공공건축 정책 확산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새로운 역할**

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소 개소 이후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건축의 공공성이 천명되었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시에서는 총괄건축가를 선임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공건축의 새로운 실험을 이어가고 있고, 충청남도는 ‘충남 공공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공공시설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 부산시, 경북 영주시 등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공공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고 공공건축 질적 향상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역시 변화해야 한다. 우선 좋은 공공건축의 지향점과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보다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지원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 기준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가 중심이 되고 장소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기준과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 지자체의 관련 조직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여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고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여 공유하고 전파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서수정 외(201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 서수정 외(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